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해외정책금융 개선 방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외건설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원 확대방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투자 금융 등 해외 정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금융기관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해외 투자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 관련 상품으로는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이처럼 해외건설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사업 관련해 융자한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전무(<표 1> 참조).

< 표 1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 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나,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

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용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용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 수출보험 확대방안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금융 기관임.
-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음.
- 이 중 수출보증보험 실적은 2007년 1조 7,344억원이고, 이 중 35.5%인 6,153억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은 2006년 1,327억원, 2007년 4,81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함(<표 2> 참조).

<표 2>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건설 관련 수출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외공사보험	-	3,150	-	4,408	-	2,373	-	8,730	
수출보증보험	대기업	172	12,594	92	6,316	57	9,619	72	11,190
	중소기업	145	2,326	241	3,682	212	3,627	312	6,153
	중소기업 비중	-	15.6%	-	36.8%	-	27.4%	-	35.5%
	합계	317	14,919	333	9,998	269	13,247	384	17,344
환변동보험	-	69,773	-	123,606	-	162,709	-	169,793	
해외투자보험	2	805	5	646	2	1,327	9	4,817	
해외사업금융보험	-	-	-	-	-	-	-	2,190	

주 : 수출보증보험은 건설공사 이외의 선박 등에 관한 실적을 포함한 자료임.
 자료 : 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함.
-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현재 중소기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녹색성장과 녹색건설, 그리고 위기 돌파의 기회

■ 녹색(green)의 글로벌 아젠다

- 현재 전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과 동시에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은 녹색성장 관련 녹색상품이 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 과거 30년간 히말라야눈의 2/3가 사라졌고 유엔환경국(UNEP)에 의하면 2050년까지 히말라야눈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음.
- 대기권 내 탄소가스 함유량은 0.035%에 불과하지만 1% 도달시 반드시 지구병하기가 도래했다는 경고는 물론 탄소가스 함유량이 수직 상승해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MB정부의 3대 기본 정책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지목

- 2008년 815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녹색성장을 3대 정책에 포함시켰음을 선언한 바 있음.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크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제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음.
- 녹색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팀으로 녹색기획단이 이미 발족했음.

■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및 녹색건설 움직임

-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이 지목되고 있음.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까지 저감시키겠다는 국가정책을 발표함.
- 독일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음. 영국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발표
- 미국도 2020년까지 1990년도 수준, 1950년까지는 1990년 대비 8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

■ 탄소제로 및 탄소중립도시 건설 움직임

- 국내는 세종시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0%를 감소하는 모범도시의 건설 계획을 발표. 지자체별로 '탄소중립도시' 혹은 '저탄소도시' 등의 이름으로 시범도시계획을 경쟁적

으로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맞는 해에 상하이에 동탄신도시를 건설해 세계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미국의 1/10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비중을 두고 있음.
-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건설 중인 ‘탄소제로도시’는 UAE 아부다비에서 건설되고 있는 ‘마스다르시’임. 마스다르의 3대 목표는 아래와 같음.
 - 탄소배출 제로(emission zero)
 - 폐기물배출 제로(waste zero)
 -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

■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관계

-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녹색도시를 지목하는 것은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탄소가스배출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임.
-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높음. 미국 등 선진국은 도시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35~40%임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사용 비중은 50% 이상이 대부분일 정도로 높음.
- 국내 건설상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폐기물 배출량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 사용 비중 : 50% - 탄소가스 배출 비중 : 50% - 폐기물 배출 비중 : 50%

■ 녹색도시 건설 「선 시범 후 확대」가 필요한 이유

- 탄소중립 혹은 탄소제로도시의 건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과 기술임. 따라서 상당한 시행착오는 물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 손실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 가장 앞서가는 마스다르시 건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녹색도시 건설에 도입 가능한 성공사례를 도입하고 반대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철저히 기술개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큼.
- 전면 확대보다 선 시범 후 확대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로 판단됨. 건설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은 국가 전체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높음.

이복남(연구위원, bnlee@cerik.re.kr)